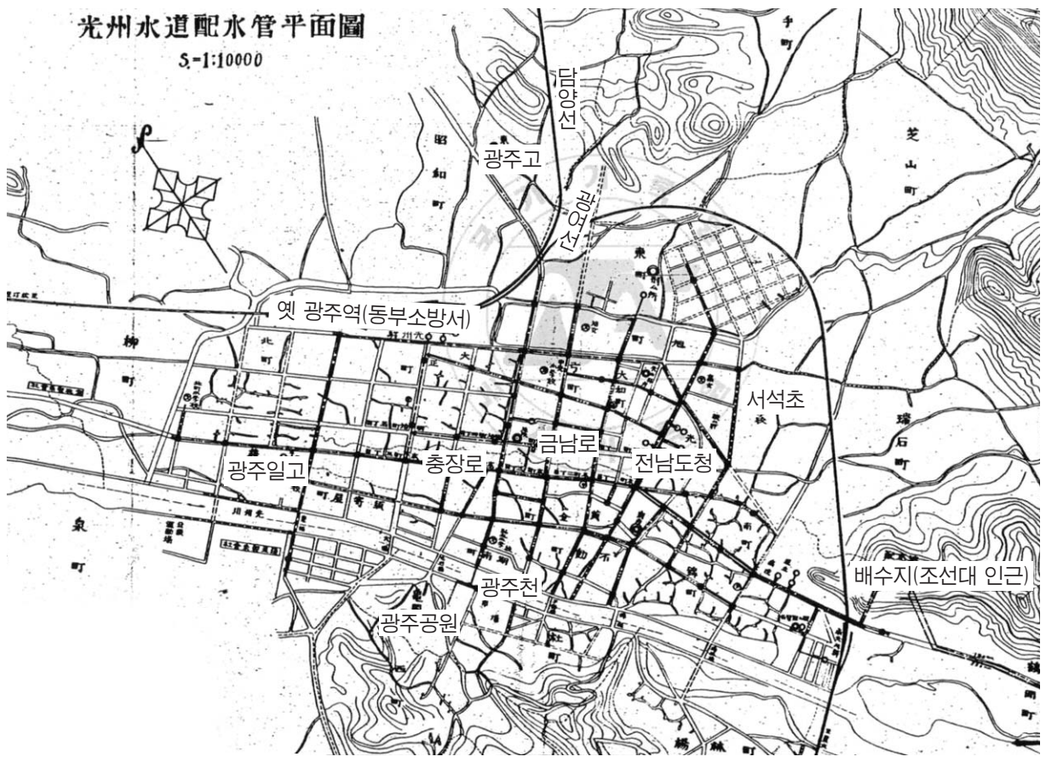
광주민 세금으로 설치하고 혜택은 일본인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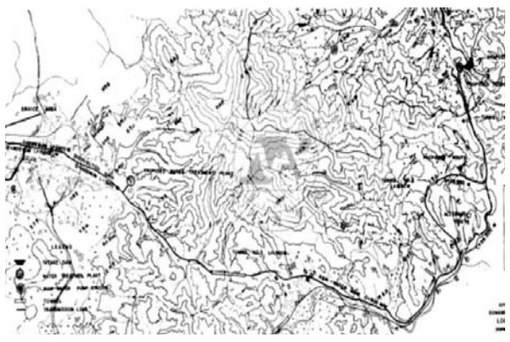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광주편〉

8. 日 강점기 차별의 상징 수돗물 ②



1920년 5월30일 광주의 첫 수도 통수 이후 보완공사를 했던 광주읍은 1935년 광주부 승격과 함께 1936년부터 제2수원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확장공사에 착수했다. 이 공사를 통해 수도배수관은 구도심뿐만 아니라 외곽으로 뻗어나가게 됐다.



1964년 AID 차관 16만 달러를 유치해 착공한 동복수원지와 광주시가지와의 거리 및 위치를 알려주는 도면.

■ 광주수도 확장공사 개요

연도	전용전	사설 공용전	공설 공용전	계	급수구역 총인구	급수 인구	하루 평균 급수량
1925	507	70	71	648	15,727	5,679	
1926	415	68	37	520	21,037	6,863	
1927	407	81	35	523	22,102	4,381	828㎥
1928	512	87	32	631	22,780	4,673	872㎥
1930	557	133	65	755	25,000	4,197	
1931	591	122	26	712	32,547	5,668	
1933	980	95	13	1,088	35,148	7,978	941㎥
1935	1,057	92	13	1,162	33,008	8,114	854㎥
1937	1,305	58	12	1,375	56,444	9,810	1,135㎥

일제강점기 수돗물은 자동차, 증기기관차 등과 함께 도시 근대화의 상징이었다. 수돗물을 쓰는지 여부에 따라 앞선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로 분류되기도 했다. 광주가 전국에서 15번째로 수돗물을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1920년대까지 광주라는 도시의 중요도가 그 정도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물론 일제강점기 일본인 거주지역에 그 혜택이 돌아갔던 시설이었지만, 이 수도 시스템은 오로지 우물에만 의존했던 광주 지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편리함, 그것은 소중히 간직됐던 과거 가치를 신속하게 삭제해나갔다. 앞서 언급했듯 도로가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했던 광주읍성을 허물었고, 근대적인 수도 시스템은 수천 년간 이어졌던 광주 물길의 마지막 종착지인 우물과 주민들의 모임장소가 됐던 우물가를 사라지게 했다.

호남의 중추도시로 성장하고 있던 광주군은 일본인 거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고, 도시적 혜택을 보려는 주변 소작농들도 모여들면서 1923년 인구가 10만39명으로 10만명을, 시가지인 광주면 역시 1924년 2만969명으로 2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수돗물 수요도 급증했다.

광주면은 1930년 6월5일 조선총독부 전라남도령 제9호를 통해 제1수원지가 자리한 광산군 지한면 운림리(지금의 동구 운림동) 일대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설정하면서 수돗물 원수 보호에 나섰다.

이후 1931년 4월1일 지방제도 개편과 함께 읍으로 승격하면서 관할구역이 넓어지고 인구도 늘어난 광주는 본격적으로 숙원사업이었던 '수도 확장'에 매진하고 있다.

광주읍은 1933년 5월1일 조선총독에게 '상수도확장비 국고보조의 건'을, 이어 6월1일 '광주 상수도 확장공사비 국비보조에 관한 건'을 보고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1932년 말 급수구역 내 3만3480명의 거주인구 가운데 수돗물 급수인구는 5586명으로, 급수율이 16.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광주읍은 1940년 장래 인구를 5만600명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급수인구를 2만명(급수율 40%), 공급량을 1인당 평균 100ℓ 최대 150ℓ 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0만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국고 14만원(연 7분 이내 10개년 원리균등상환), 지방비 보조 12만원, 읍비 14만원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착공은 계속 미뤄졌다. 국고보조액을 두고 광주읍과 전남도, 조선총독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때 예산 규모를 낮춰 보고하는 등 소극적이었던 광주읍은 이듬해인 1934년 7월13일 '상수도확장비 국고보조품신에 관한 건'을 보고하면서 인구 팽창 외에도 종연(가네보) 방적 등 대규모 공장, 세무관서 신설 등에 따라 총공사비 42만원을 투자하는 공사가 불가피하다며 14만원의 보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7월21일 1935년 4만6000원, 1936년 4만7000원, 1937년 4만7000원 등 3년 동안 14만원을 지원하

조선총독부, 수도 설치·확장 지원 인색
국고보조비 두고 마찰…광주읍 부담 늘어
1935년 빚 28만원…예산 23만원 넘어서
해방 후에도 빚내서 수원지 건설 확대

되 공사 일부 변경을 조건으로 인가했다. 수도는 '값비싼' 기반시설이었으며, 따라서 조선총독부 역시 각 도시의 경쟁적인 수도 설치 또는 확장에 상당히 까다롭게 대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 같은 광주읍의 막대한 투자는 후일 극심한 재정난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제는 광주를 비롯한 조선의 각 도시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자신들의 자본을 투자한 것이 아니었다. 기채, 즉 빚을 내 일본인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시설들을 만들었고, 광주 지역민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이를 갚아나갔다.

수도 및 하수 설치, 광주천 개수 및 방수공사, 도살장 설치 등에 나선 1935년 당시 광주읍의 빚은 27만4750원으로, 그해 세입예산 22만4300원을 넘어설 정도였다.

이미 인가를 받아둔 광주읍의 수도 확장 공사는 계속 미뤄졌다. 이는 1935년 4월13일 서방면·지한면·효천면·극락면 일부가 광주읍으로 편입되고 그 해 10월1일 광주부로 승격되는 등의 일정 속에서 조선총독부가 공사 착공을 연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부는 1936년 들어 수도 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원 설비, 취수탑공사 등 세부 공사 내역을 포함한 광주부 수도확장공사 설계서를 작성했다. 그동안 숱한 보완공사 덕에 급수인구는 1925년 5679명에서 1937년에는 그 2배에 육박하는 9810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설계서에서 광주부는 '용연리 광주천 지류의 상류'에 보다 크고 견실한 수원지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광주읍 당시의 논의 자체를 대폭 수정했다. 이 설계서에 따르면 시가지를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분류, 재래시설은 고지대, 신규 시설은 저지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했다. 고지대는 광주천 좌안 및 우안 대체로 표고가 45m 이상, 저지대는 광주천 우안으로 45m 이하로 했다. 이 공사는 제1기(1935~1936년)와 제2기(1945년 시행 예정)로 구분, 예산은 국고보조 8만4000원, 도비 보조 10만5000원, 부비 23만1000원 등 42만원을 투입, 광주부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도 확장을 통해 광주부는 1955년 급수구역 내 추정 거주인구 8만2600명 가운데 3만8000명이 수돗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고, 이는 초창기 일본인 거주 지역 중심으로 중심 시가지 일부에만 공급했던 수돗물 수혜지역을 부족하지만 광주 전체로 확대하는 조치였다.

그러나 불안한 세계 정세 등으로 물가는 연일 급등했고 그 영향으로 공사비는 47만원으로, 이후 다시 3만5000원이 추가돼 50만5000원(국고보조 9만4000원, 도 보조 11만7500원, 부비 29만3500원)으로 대폭 올랐으나 애초 계획 급수보급률은 38%에서 36.3%로 감소하는 등 도리어 공사 규모는 축소됐다.

1940년 이후 1945년 해방까지 수도 설비에 대한 추가 투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추세는 해방 이후까지 상당기간 지속됐을 것이다.

1945년 당시 제1·2수원지의 1일 급수량 4000t과 저수량 57만4058t만으로는 도저히 시민의 급수난 해결이 불가능했으며 1950년대 말 광주의 급수인구는 약 5만명으로 당시 인구 12만5000명의 40%에 불과, 인구 16만7000명 중 급수률이 62%인 대구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치였다. 심각한 급수난을 겪자 1945년 중앙청의 자재 주선과 군정 협력으로 총공사비 35만5900원을 투입, 응급시설로 용연리 여과지를 착공해 1946년 5월 준공했으며, 이후 1955년 8월 광주시 북구 동운동(운암동)에 공사비 7032만7000원을 들여 제3수원지 건설에 나서고 있다.

1962년 8월 광주시 북구 청옥동에서 제4수원지인 석곡수원지 건설공사가 착공됐고, 1964년 국제개발법(Ac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차관으로 외국자본 16만 달러를 유치하고, 국내자금 5억2000만원 등을 합쳐 모두 9억2800만원으로 담양군 이서면과 화순군 동복면의 경계지점에 동복수원지 조성에 나서고 있다.

당시 광주시의 인구는 33만4259명에 이르고 있었으나 여전히 급수율은 40%에 불과했고 그것마저 1일 3시간 제한급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